



인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신흥국 전략

인도 예산안 핵심 : 7대 전략 산업과 인프라

1) 경제 고성장 기조의 지속과 2) 성장 기반 강화 두 축으로 구분 가능

인도 FY2027년 예산안이 2월 1일 발표됐다. 인도 예산안은 향후 1년간의 정책 우선순위와 성장 전략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문서로, 연중 가장 중요한 정책 이벤트 중 하나다. 직전년도인 FY2026에는 트럼프 재임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가 예상되면서 정부 정책 기조가 내수 부양에 강하게 기울었다. 실제로 중산층 중심의 세제 개편과 GST(상품 및 서비스세) 인하를 통해 소비심리를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FY2027년에는 단기 경기부양보다는 고성장 기조의 지속과 성장 구조 고도화에 다시금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에 시장의 관심 역시 그간 인도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 기조의 유지 여부에 집중된 상황이었다.

이번 예산안은 크게 1) 경제 고성장 기조의 지속과 2) 성장 기반 강화라는 두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정부는 제조업·서비스업·농업을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으나, 정책 메시지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영역은 제조업이다. 정부는 7대 전략 산업(바이오, 반도체, 전자, 희토류, 화학, 자본재, 섬유)을 중심으로 제조 규모 확대와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특히 바이오·전자·반도체는 고부가 제조 전환과 공급망 자립이라는 기존 정책 목표와도 직결되고, 밸류체인 전반으로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중장기 성장 경로를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판단되며, 세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바이오는 인도가 이미 비교우위를 보유한 분야로,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제네릭 의약품과 백신을 중심으로 한 대량 생산 역량이 핵심 강점으로 작용해왔다. 다만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생산기지 성격이 강했고, 바이오시밀러나 고부가 신약 등에서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번 예산안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가운데, 고부가 의약품 개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단순 생산기지에서 벗어나 바이오 강국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겠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이에 향후 5년간 1,000억 루피를 투입해 인도를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며, NIPER(국립제약교육연구소) 3곳을 신설하고, 100개 이상 공인 임상시험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자 분야에서는 정책의 무게중심이 보다 분명하게 이동했다. 그간 인도 정부의 전자 제조 정책은 PLI를 통해 완제품 조립·수출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왔으나, 이번 예산안은 정책 초점이 부품 국산화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25년 4월 도입된 ECMS(Electronics Components Manufacturing Scheme)는 전자부품의 국내 생산 확대와 수입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한 인센티브 제도로, 시행 초기부터 기업들의 신청이 빠르게 확대되며 예상 투자 약정 규모가 초기 투자유치 목표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ECMS 인센티브 한도를 기존 약 2,300억 루피에서 4,000억 루피로 증액했다. 이는 전자부품 분야의 투자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강하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향후 부품 현지 조달을 상응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직·간접 고용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022년 추진된 ISM 1.0의 연장선에서 ISM 2.0이 제시됐다. 장비·소재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숙련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반도체 공급망 전반의 자립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성장 기반 강화 측면에서는 인프라 개발이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단기적인 경기 부양 수단이 아니라, 제조업 고도화와 민간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는 중장기 성장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FY2027 예산에서 인프라 관련 지출은 12.2조 루피로 전년 대비 +8.9%, 수정 예산안 대비로는 +11.5% 확대됐다. 이번 예산안은 도로·철도 등 기존 인프라 투자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Tier II 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 인프라 확충을 전면에 내세웠다. 아울러 최근 민간 부문 인프라 투자가 부진한 점을 감안해, 인프라 리스크 보증 기금(Infrastructure Risk Guarantee Fund) 설립을 통해 프로젝트 초기 단계의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했다. 민간 개발업체와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공 투자 중심에서 민관 협력(PPP) 기반의 인프라 확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종합하면, 이번 예산안은 전략 산업 육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첨단 기술 제조 허브로의 도약을 추진하는 동시에,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예산안 발표 당일인 2월 1일 인도 NIFTY50 지수는 -1.96%로 큰 폭 하락했는데, 이는 예산안에 선물·옵션(F&O)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STT) 인상안이 포함되면서 단기적으로 거래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상기 정책들의 효과는 구조적으로 누적되는 성격이 강해 단기 실적이나 주가로의 즉각적인 전이는 제한적인 반면, 거래비용과 같은 요인은 단기 수급이나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기 쉽다. 이에 따라 장기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나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당분간 정책 모멘텀이 비교적 가시적인 인프라, 전자부품, 바이오 등 업종 중심의 대응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한다.

차트 1. 인도 7대 전략 산업 부흥 계획

인도 7대 전략 산업 부흥 계획	
산업	세부 내용
바이오	-향후 5년간 1,000억 루피 투자해 인도를 글로벌 바이오 제조 허브로 육성 -국립 제약교육연구소(NIPER) 3곳을 신규 설립 -100개 이상 공인 임상시험 기관 네트워크 구축
반도체	-인도 반도체 미션(ISM) 2.0을 출범해 장비·소재의 국내 생산 역량을 확충 -연구·교육(훈련)센터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숙련 인력 양성 추진
전자	-전자 부품 제조 지원 예산 4,000억 루피로 증액
희토류	-희토류 자원이 풍부한 오디샤, 케랄라, 안드라프라데시, 타밀나두 주를 지원하기 위해 희토류 전용 회사를 설립하여 채굴, 가공, 연구 및 제조를 촉진
화학	-주(州)정부 주도로 전용 화학단지(Chemical Park) 3곳 조성
자본재	-2개 지역에 디지털 및 자동화 기반의 하이테크 단지(tool room) 조성해 고정밀 부품을 설계·시험·제조하고 대량 생산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체계를 구축 -건설 및 인프라 장비 역량 강화 지원책 도입해 고부가·첨단 기술 기반 장비의 국내 제조 확대 -향후 5년간 1,000억 루피 투입해 글로벌 경쟁력 갖춘 컨테이너 제조 생태계 조성
섬유	-천연섬유·인조섬유·신소재 섬유의 자국 내 제조를 추진하고, 전통 섬유 클러스터의 현대화(기술 고도화, 설비 지원 등) 추진

자료: GOVERNMENT OF INDIA, 하나증권

차트 2.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혁

제조업 부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혁
보세구역 내 위탁가공업체에 자본재·설비 등을 제공하는 비거주자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면제
보세창고 내 부품 보관과 관련해 비거주자 대상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제도 도입·적용
프리미엄 제조업체(trusted manufacturers)에 대해 관세 납부 유예 기간 부여
수출용 수산물 가공에 사용하는 중간재의 무관세 수입 한도를 전년도 수출 FOB 기준 수출액의 1% → 3%로 상향
가족·합성 소재 신발류 수출에 적용되던 중간재 무관세 수입 혜택을 신발 어퍼(shoe uppers)에도 확대 적용
가족·섬유의복 및 가족·합성 신발 수출업체의 완성재 수출 기한을 6개월 → 1년으로 연장
전자레이저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부품에 대해 기본관세(BCD) 면제
항공기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해 기본관세(BCD) 면제
국방 관련 정비·수리·MRO 수요를 위한 항공기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수입 원재료에 대해 기본관세(BCD) 면제
신뢰할 수 있는 장기 공급망을 보유한 상시 수입업자(regular importers)에 대해 위험관리 시스템 내 우대 조치 적용
전자 봉인(electronic sealing)을 활용한 수출 화물의 경우, 공장 출하 → 선적까지 공장 출발지에서 일괄 통관 가능하도록 지원
SEZ(특별경제구역) 내 자격 요건을 충족한 제조사가 국내관세구역(DTA) 내 판매 시 1회 한정 특별 조치로 인화된 관세율 적용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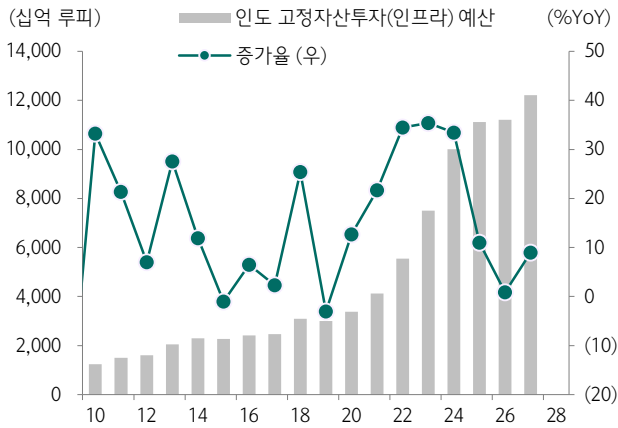
자료: GOVERNMENT OF INDIA, 하나증권

차트 3. 인프라 부흥 계획

인프라 부흥 관련 정책
인프라 리스크 보증기금 조성
CPSE(중앙정부 공기업) 보유 부동산 자산 전용 REITs 설립
동부-서부를 연결하는 신규 전용 화물망 구축
광물자원이 풍부한 지역, 산업거점 및 항만을 연결하는 국가 수로 20개 노선 신규 운영
내륙수로 운송을 지원하기 위한 선박 수리 생태계 구축
연안 화물 운송 촉진 제도(Coastal Cargo Promotion Scheme)를 도입해, 내륙수로·연안해운의 운송 비중을 2047년까지 6%→12%로 확대
수상비행기 VGF 제도를 도입해, 국산 제조 촉진
SASCI 제도*를 통해 주(州)정부에 2조 루피 지원
*주(州)정부의 자본지출을 직접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조건부 자금 지원 제도
동해안 통합 산업회랑(Integrated East Coast Industrial Corridor) 개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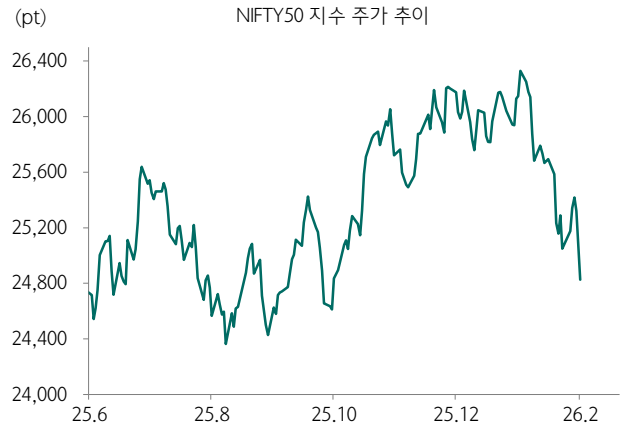
자료: GOVERNMENT OF INDIA, 하나증권

차트 4. 인도 인프라 예산 및 증가율



자료: CEIC, 하나증권

차트 5. 인도 NIFTY50 지수 주가 추이



자료: CEIC, 하나증권